

언론의 개방담론 논증구조 분석

스크린쿼터제 관련 의견보도에 대한 Toulmin의 논증모델과 Stock Issue의 적용

박성희*

(이화여자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의 의견보도는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대 사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건전한 공론의 조성은 언론의 미명한 몫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개방담론이 언론의 의견 보도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관련 시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논증학자 툴민(Toulmin)의 논증모델(Argumentation Model)과, 정책 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 수사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각기 다른 논쟁공동체(argument fields)를 구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서로 다른 논리와 전제를 가진 논쟁공동체는 이슈의 선택과 증거의 사용에서 상호 반박이나 대화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찬성과 반대와 중립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가운데 반대쪽 의견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논리의 밀도 구성 면에서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현 상태(status quo)의 문제구성에서 대안의 합리성 지적에 이르는 다양한 논리를 구비하고 있었다. 이는 증거 제시의 부담을 지닌 쪽이 밀도 높은 논증을 한다는 추정(presumption)의 개념에 어긋난 것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권위적인 논증모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스크린쿼터제라는 논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논점을 이슈화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이 찬반 상호 접점의 모색이나 증거의 수집, 논리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논증, 사실, 스크린쿼터, 수사 분석, 언론

* shpark1@ewha.ac.kr

1. 들어가며

매스미디어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상관조정기능을 꼽는다. 상관조정기능이란 단순한 사실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처방해 사람들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매스미디어의 기능(오택섭·강현두·최정호: 36)으로, 주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 사설 논평 해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동일한 사건 혹은 사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의견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의 교환은 상호 설득과 이해를 도모해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다. 반면 상관 조정 과정에서 편견이나 불공정성이 부당하게 개입될 경우 해석의 다양성을 오히려 제한해 사회 순응적 시각을 확산하는 역기능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언론의 상관조정 기능을 통한 공론의 형성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소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논의의 기초가 된다. 정치사회학자 퍼트남(Putnam, 2000)은 미국 공동체의 붕괴를 지적하며 점점 줄어드는 ‘사회적 자본’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구조 혹은 사회적 관계의 한 측면을 말하며,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 행동을 쉽게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및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지닌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여론 형성의 기본 조건이자 과정이며, 여론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언론의 역할에 주목한 메리츠(Merritt)는 언론이 ‘시민’을 ‘공중’으로 길러내야 한다며 그를 위해 ‘정보언론(journalism of information)’에서 ‘대화 언론(journalism of conversation)’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언론인들은 첫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그들에게 연관된 정보를 찾아 보도해야 하고, 둘째,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 보도해야 하며, 셋째,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가치를 찾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McCombs & Merritt,

2004).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많은 양의 뉴스가 아니며 이해를 확인하고 공유하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위 ‘공공저널리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이 같은 시각은 가속화 되는 개인화와 상업성을 담보로 한 언론의 지나친 객관성 추구가 사회통합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환기시키고 있다.

의견보도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1840년대 일전신문(페니프레스) 등장 이전의 미국 언론은 당파적 의견의 집합소였다. 그러나 전신 기술이 발명되면서 뉴욕을 중심으로 AP통신이 설립되고, 각기 다른 정파의 언론을 취합해 보도하는 직업적인 기제로 언론들은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고 뉴스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한다. 20세기 들어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치루면서 사실에 깃든 정확성과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서 새로이 정치칼럼을 신설하는 등 의견보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Shudson, 1978). 사실과 의견의 분리 원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또다시 의견의 가치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라쉬(Lasch, 1990)는 언론의 객관성 추구가 말미암아 오늘날 공적 토론이 사라졌다고 개탄하면서, 언론의 의견보도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참여 욕구를 높여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해소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같은 흐름은 미국 언론을 논의의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언론의 정파성과 의견보도의 영역이 종종 사회적 논점으로 등장하는 국내 언론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갈등 이슈의 끊임없는 부상, 그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협, 다양한 이념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점철된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의견 보도를 통한 공론장 활성화는 정책 결정과정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보도 대상이 되는 사건사고와 이슈의 선정, 중요도의 우열 가림 등에도 끊임없이 언론의 가치기준이 작용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같은 언론의 의견보도 영역에 대한 조명은 언론행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언론의 사실보도 영역이 아닌 이슈의 발굴과 논점 형성 영역에

주목, 스크린쿼터 축소 논제를 다룬 국내 9개 일간지의 사설과 칼럼 등에 표출된 개방담론에 내재한 이슈와 그 이슈를 둘러싼 논증구조를 분석한다. 여기서 이슈란 찬성과 반대의견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논점을 말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논쟁적(controversial)인 성격을 지닌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라는 이슈에는 크게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내재하고 있으며, 어느 한 쪽이 설득적으로 다른 쪽의 논리를 움직이고자 할 때 다양한 증거를 사용한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데, 그 상호 과정을 논증(argumentation)이라고 정의한다(Toulmin, 1958). 즉 감정적이거나 근거 없는 주장은 글자 그대로 ‘주장(claim)’이며, 주장이 증거의 힘을 받았을 때 비로소 ‘논증’이 되고, 상호 논증의 교환을 통해 제안된 정책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추구하는 과정이 곧 ‘토론(debate)’인 것이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라는 이슈는 또 다시 작은 하부 이슈들로 구성되어 각각의 영역에서의 논리를 구축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정책에 대한 토론은 정책 제안자와 반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정책의 제안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이슈를 발굴해 논점을 구성해야 한다. 첫째, 현 상태(status quo)의 유지가 위해한가? 다시 말해, 현 상태로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가? 둘째, 새로이 제안된 정책이 현 상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셋째, 제안된 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인가? 혹시 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첫째 질문은 동기적 이슈(motive issue)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 두 번째 질문은 치유 이슈(cure issue)의 발굴에, 셋째 질문은 비용 이슈(cost issue)의 발굴에 각각 도움을 준다. 즉 축소 찬성입장에서의 ‘동기이슈’의 일례로 “스크린쿼터제의 현행유지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를 들 수 있고, 축소 반대 입장에서의 ‘치유이슈’의 일례로 “스크린쿼터를 줄인다고 국내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있으며, 역시 축소 반대 입장에서의 ‘비용이슈’로서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 문화적 침략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등이 있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스크린쿼터 관련 개방화 담론은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그 안에서의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언론이 유통시키는 그 같은 의견과 논리를 바탕으로 공적인 담론이 형성되어 그 여론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사회의 언론과 공론의 관계이다. 각각의 이슈는 찬·반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증거를 논거로 삼아 사회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반된 입장의 타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의견보도 영역은 이같은 담론의 이슈화와 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기여해야 한다.

공공의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얻는 이득은 다양하다. 토론을 통해 민주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며, 지식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유도하고, 글쓰기와 듣기 훈련을 증진시키며, 사회적인 성숙도를 높이고, 개인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에 노출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다 (Freeley & Steinberg, 2005).

기존의 저널리즘 연구들이 주로 언론보도의 사실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본 논문은 언론의 의견 영역, 즉 사설 칼럼 등에서 개선되는 우리사회의 논점 형성과 논쟁 진행 양식을 분석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언론이 발굴해 보도하는 이슈의 논쟁 기제로서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논점의 체계화 및 찬·반 의견의 균형여부를 분석해 문화개방 담론을 구성하는 우리 사회의 의견 유통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더 나아가 의견쓰기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논의

1) Toulmin의 논증모델: 근거(data), 주장(claim), 조건(warrant)

논증(argumentation)이란 증거(evidence)가 수반된 주장(claims)이다. 20세기 들어서 수사학자들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학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제되어 나온 개념이 바로 논증적인 접근이다. 논증은 따라서 특정한 활동에 초점을 둔 수사학(Borchers, 2006)으로, “한 사람이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 자기 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이 믿거나 행동하도록 하는 기술 혹은 활동 (McBurney & O’Neill & Mill, 1951)”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논증학자들이 강조한 부분이 ‘합리적인 담론(reasoned discourse)’이다. 일반적으로 수사학이 감정과 웅변의 기술, 기교 등 확장된 관심을 보여 온 것에 비해 논증은 글자그 대로 증거와 논리를 통한 체계적인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대 수사학을 논증에 초점을 맞춰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가 웨이틀리(Richard Whateley)다. 그는 “논증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고 논리를 배열하는 것이야말로 수사학 고유의 영역(Whateley, 1963: 40)”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감정의 이입이나 전달은 수사학이 아닌 시(詩)의 영역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수사학이 모든 종류의 작문을 관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웨이틀리는 법정 논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증거의 논리를 일반 진술에도 적용시켜 추정의 원칙(presumption)과 증거 제시의 부담(burden of proof)의 개념을 통한 합리적인 담론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툴민(Toulmin), 페럴만(Perelman), 고틀리엠펜(Gottlieb) 등 논증의 대표적 학자들은 논증의 기술로서 오랜 수사학적 연구의 전통을 지닌 귀납법과 연역법을 보완해 현대적 맥락에서의 실제 정책 논쟁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모색해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논증이론을 보완한 다양한 개념들을 개발해냈다. 툴민과 페럴만은 논증의 언어학적 중요성에 주목했으며, 청중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는 등 수사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툴민의 논증 구조는 논증을 도식화하고 비평하는데 적합하고도 유용한 도구로서 평가받고 있다(Brockriede & Ehninger, 1960; Borchers: 99에서 재인용).

툴민이 제안한 논증의 구성요소는 주장(claim), 근거(data), 조건(warrant) 등 셋으로 나누어진다. 주장이란, 화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장 폭넓고 포괄적인 진술로, 그 안에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가장 추상적인 단계가 높은 진술을 말한다. 근거란, 주장보다 한 단계 낮은 추상의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주장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 사실, 혹은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리적인 토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근거와 주장의 관계는 ‘고로(therefore)’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이 상례다. 조건은 틀린 논증법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주장과 근거 사이를 잇는 일반적이고 가정적인 진술(Toulmin, 1958: 98)”을 말한다. 힘 있는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보강에 주력하기 보다는 근거에서 주장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힘 있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가령 “선정적인 매체를 규제하면 테러리즘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펴기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는 퍼블리시티를 얻기 위해 테러를 자행 한다”는 논리적인 근거(data)를 제시해야 하며, 그 근거와 주장 사이에는 “선정적인 매체가 테러리스트에게 퍼블리시티를 제공 한다”는 조건(warrant)이 자리하고 있다. 이 논증의 설득력은 조건부분인 “선정적인 매체가 과연 테러리스트에게 퍼블리시티를 제공 하는가”에 상대방이 동의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조건을 구성하는 부분이 자명한(self-validating) 사실이 아닐 경우,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Freeley & Steinberg, 2005).

위에 언급한 세 가지 기본 요소 이외에도 틀민은 실제 논증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세 가지 덧붙였는데, 그 중 하나는 논증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질적 표현, 즉 ‘반드시’ ‘아마도’ 등의 수식어(qualifier), 또 하나는 논증이 성립하고 있는 근본을 부정하는 제한, 즉 ‘...하지 않는 한’에 해당하는 반박(rebuttal), 마지막 하나는 조건을 보강하는 지지(backing)가 있다.

에닝거와 브로크라이드(Ehninger and Brockriede, 1960)는 보증의 전제를 다시 실질적인 전제(substantive warrants), 동기적인 전제(motivational warrants), 권위적인 전제(authoritative warrants)로 세분화하여 설명했다. 실질적인 전제는 실제 사실에 입각한 정보가 사용되는 전제(“선정적인 매체가 테러리스트의 놀이터다”)를 말하며, 동기적인 전제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선정적인 매체를 규제하지 않으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권위적인 전제란 화자의 권위에 입각한 전제(“선정적인 매체를 규

제하는 것이 나의 공약이다”)를 말한다.

틀린 모델의 강점은 논증이 어떻게 구성되고 사용되는지 보여주고, 논증에서 강조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Ehninger and Brockriede, 1960) 논증 구조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있다. 논증의 수사적 분석은 “주장과 근거와 조건을 분리해 내서 어떤 종류의 조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어떤 조건이 숨어있는지를 밝혀내는 것”(Hart, p.99)이기 때문이다.

2) Stock Issues Model을 통한 주제설정: 동기(Motive), 치유(Cure), 비용(Cost)

논증의 당사자들에게 주제 선택은 설득적인 논증의 구축과 승산의 확률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주제 선택과 관련된 논의와 관심은 고대 수사학에서부터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본 논문은 논증의 대상이 되는 이슈를 추출하기 위해 정책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하도록 한다. 정책 논쟁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이슈를 발굴하는 방법이 정책논쟁 이슈모델이다.

정책 논쟁의 이슈는 고대 수사학자들이 명명한 수사학의 5개 영역, 즉 주제설정(invention), 배열(arrangement), 표현(style), 암기(memory), 발표(delivery) 중 주제설정(invention)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의 목표는 어떠한 논증에라도 적합한 설득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었으며, 그를 위해 증거와 연결된 이슈를 찾아냄으로써 논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주제설정은 다시 논점간의 접점(stasis), 증거(proof), 공통적인 논점(topoi) 등 세 갈래에서 각기 논의가 진행되었다. 키케로(Cicero)는 접점과 관련, “사람들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있는 모든 이슈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Borchers: 44). 고대 수사학자들은 의견간의 접점을 사실 여부의 규명, 용어의 정의, 발생한 일의 본질 등에 대한 논쟁 등에서 접근했는데, 당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철학 논쟁이나 법정 논쟁이 주를 이루었다.

정책논쟁 이슈 모델이란 접점 모델(stasis model)의 논리적인 연결선에서 현대적 정책 논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세기 들어 체계화되고 활용되어 온 모델이다. 이슈를 통한 논쟁은 현상유지(status quo), 현재의 문제점(problem), 제안된 해결책(proposed solution) 등 세 가지 변수의 조합을 이용해 상호 설득을 염두에 둔 설득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제안자들은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이해시키고 반대 의견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 위의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해 현상유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제안 이외의 더 적합한 정책이 없음을 보이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이슈 제안방법을 썼다.

정책논쟁 이슈 모델 중 ‘동기 이슈’는 대개 모든 논쟁은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변화를 원하는 자 사이에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 즉 제안된 정책의 중요성, 내지는 절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현 상태의 위험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위해(harms)’ 혹은 ‘이득(advantage)’ 이슈라고도 불린다. 동기 이슈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논쟁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의 효과의 문제가 또 다른 이슈가 되어 반대 측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의 제안자들은 새 정책이 그러한 위험한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치유 이슈’를 소개해야 한다. 문제의 해결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용해 이슈(solvency) 이슈’로도 불린다. 이제 현 상태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고(동기) 현상의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안(치유)한 사람들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비용 이슈’로, 꼭 필요한 만큼의 처방이자 더 나은 처방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처럼 각각의 단계에 대해 유사한 듯 다른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정책이슈 모델이 몇 명의 학자들에 의해 단시간에 개발된 것이 아니라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다양한 수사학 교본들을 통해 계발되고 취합되었기 때문이다. 지칭하는 단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이슈들이 현상태-문제-해결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축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이다. 토론(debate)을

두고 흔히 역지사지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슈 계발을 거친 토론이 갖는 장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특정한 이슈의 모든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식까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토론은 이기기 위한 게임이기 이전에 이슈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이다.

본 논문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수사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되, 보다 직접적인 이론적인 틀로는 톨민이 제시한 논증이론을 적용, 톨민 모델의 구성요소인 근거, 주장, 조건에 따라 논증 구조를 분석한다. 이슈를 추출하고, 그 이슈들 간의 접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책이슈모델을 사용해 동기, 치유, 비용에 따라 유형화 하고, 각각의 이슈가 톨민의 이론적 틀에서 어떠한 상호 연관을 갖고 논점을 구성해 가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3. 연구문제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 연구문제 1.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찬성, 반대, 중립 중 어떤 입장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 언론사별 의견분포는 어떠한가, 정부 비판 논조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찬성과 반대 의견은 동가·치유·비용 이슈의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각기 논리 구성의 밀도와 양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찬성과 반대 의견에 각기 상세하게 적용된 근거(data)와 주장(claim)은 무엇이며, 근거와 주장 사이의 조건(warrant)은 무엇인가.

4. 분석 대상 및 방법

앞서 밝혔듯 논증의 수사적 분석은 “주장과 근거와 전제를 분리해 내서 어떤 종류의 전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어떤 전제가 숨어있는지를 밝혀내는 것”(Hart: 99)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국내 9개 일간지에 실린 스크린쿼터제 관련 사설 및 칼럼을 대상으로 찬·반 및 그에 따른 논증의 존재 여부, 논증에 사용된 이슈의 유형, 틀민의 논증구조 분석을 알아본다. 연구 대상이 되는 사설 및 칼럼은 한국언론재단의 종합검색시스템인 카인즈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키워드로 검색,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나타난 사설 및 칼럼 118건을 1차 걸러낸 후, 이중 스크린쿼터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을 뿐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51건을 제외한 67건의 사설 칼럼을 직접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일간지별 카인즈 데이터베이스 검색 건수와 직접분석 대상 기사 건수는 <표 1>과 같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시비를 둘러싼 문화개방 관련 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지난 1년간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와 맞물려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논의의 추세를 보기 위해 2001년부터의 사설 칼럼을 다시 검색,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2006년 상반기에 스크린쿼터제 관련 가장 많은 건수의 사설-칼럼이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67건의 사설-칼럼을 스크린쿼터제 관련 입장 중 찬성-반대-중립으로 나누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제안한 이슈가 정책이슈모델에서 제안한 세 가지 범주의 이슈, 즉 현 상태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동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의 지시(치유), 제안된 지시의 합리성과 적합성 논변(비용)이 찬반측에서 각기 얼마나 포괄적으로 다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찬·반 측 논리구성의 밀도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스크린쿼터제 관련 논의가 주로 어떤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의 분석 중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틀민의 논증 구조를 이슈별 논증 구조에 적용해 강조된 요소와 실종된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즉 근거(data)와 주장(claim) 사이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 둘을 잇는 조건(warrant)

의 설득적 강도는 어느 정도 인지, 생략된 논리와 비약된 논리는 없는지를 통해 사실이 ‘합리적인 담론(reasoned discourse)’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능하는 지 점검해볼 것이다.

<표 1> 언론사별 분석대상 스크린쿼터제 사설 칼럼 게재 건수(괄호 안은 직접분석대상)
기간: 2005년 6월 7일~2006년 6월 7일

언론사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문화	한국	세계	서울	국민	합계
기사건수	8 (4)	11 (5)	28 (13)	11 (7)	16 (13)	17 (8)	7 (2)	11 (7)	9 (8)	118 (67)

<표 2> 2001에서 2006년 6월까지 스크린쿼터 관련 사설 칼럼 게재 건수

	2001	2002	2003	2004	2005 팔호안은 상반기 게재 건수	2006년 6월까지	합계
조선	3	1	13	3	3(1)	6	29
동아	1	4	8	6	4(2)	9	32
한겨레	2	2	11	5	8(3)	23	51
경향	5	4	7	4	1(0)	10	31
문화	1	0	6	2	8(5)	13	30
한국	2	2	9	5	1(0)	16	35
세계	2	1	3	4	2(1)	6	18
서울	1	1	6	6	6(1)	6	26
국민	1	4	7	7	2(0)	7	28
합계	18	19	70	42	35(13)	96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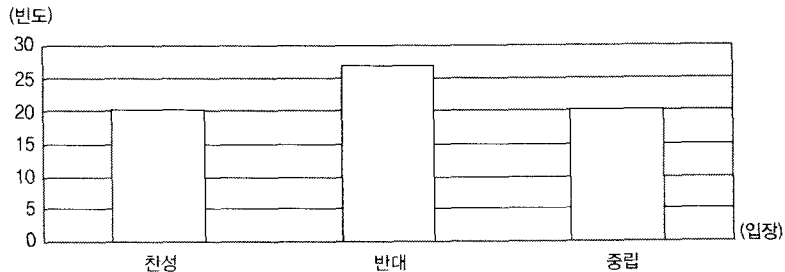
5. 연구결과

1) 찬-반-중립 입장과 정부비판

(1) 찬-반-중립 의견분포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9개 신문 67건의 사설 및 칼럼 중 찬성 논조는 20건, 반대논조는 27건을 차지했고, 중립 논조는 20으로 찬성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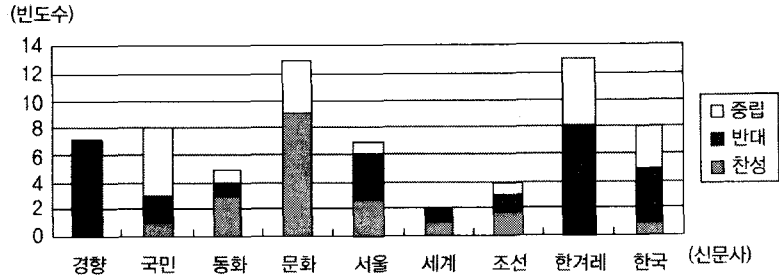
<표 3> 스크린쿼터 의견보도 찬-반-중립 분포



(2) 언론사별 찬-반-중립 의견분포

언론사별 찬-반-중립 분포는 <표 4>와 같다. 찬-반-중립 분포가 대강의 균형을 이룬 것과는 달리 언론사별로 극명한 편차가 나타났다. 중립 논조의 기사는 현장 스케치 중심의 기자 칼럼과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 등이 이에 속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중립 논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사설은 따라서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 이행과정에서의 졸속 처리, 국민설득 부재, 향후 우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등 정책외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표 4> 각 언론사별 찬·반·중립 분포



(3) 스크린쿼터 관련 논조와 정부비판과의 관계

(2)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논조를 보았다면, (3)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 논조와 정부 비판 논조의 관계를 보았다. <표 5>에서 보듯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논조의 칼럼 및 사설에서 정부를 비판한 내용을 보인 것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 즉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 정부를 비판한 내용은 절반(51.9%)에 불과, 반대론자 중에서 스크린쿼터 관련 정책과 정부 방침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 논조는 34%(23건)였다.

<표 5> 스크린쿼터에 대한 입장과 정부비판

			입장			Total
			찬성	반대	중립	
정부비판	무	Count	19	13	12	44
		% within 입장	95.0%	48.1%	60.0%	65.7%
	유	Count	1	14	8	23
		% within 입장	5.0%	51.9%	40.0%	34.0%
Total	Count	20	27	20	67	
	% within 입장	100%	100%	100%	100%	

2) 찬·반 의견의 논리 구성

찬성과 반대 의견의 구성 밀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책 논쟁 이슈 개발모델 중에서 현상유지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기적 접근, 새로이 제안된 정책의 해결적 능력에 초점을 둔 치유적 접근, 새 정책의 합리성과 적절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용적 접근이 개별 의견기사에 얼마나 고르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앞서 언급했듯, 위의 세 가지 접근은 반대 의견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디베이트) 전략상의 기술로, 논리 구조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논리의 개발이나 이슈의 공략은 현상유지를 고수하려는 쪽 보다 새로운 정책으로 변화를 가져오려는 쪽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더욱 밀도 높은 논리구조를 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논쟁은 축소가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현상유지의 개념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유무로 동기적인 접근을 측정했다. 그 결과 현상 진단은 양측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다<표 6>. 이는 각기 현 상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논거를 제시했다는 것을 뜻한다. 현상을 진단한 후 현상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정책 제시가 되어 있는가, 즉 새로운 제안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에 비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 측의 대안제시가 찬성 측에 비해 적었다. 이는 반대 측의 새로운 대안이 사실상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유지 고수라는 데에서 기인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논변에서도 찬성측이 반대 측을 앞서고 있을 뿐 아니라, 반대 측에서는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적합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적합성 논변을 전혀 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하는 측이 현상유지를 고수하는 것 이외의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표 8>.

<표 6> 찬·반·중립 의견 간 현 상태의 문제점 지적(현상 진단) 논거 사용 비교

			입장			Total
			찬성	반대	중립	
현상 진단	무	Count	3	6	9	18
		% within 입장	15.0%	22.2%	45.0%	26.9%
	유	Count	17	21	11	49
		% within 입장	85.0%	77.8%	55.0%	73.1%
Total		Count	20	27	20	67
		% within 입장	100%	100%	100%	100%

<표 7> 찬·반·중립 의견 간 새로운 정책의 치유효과(대안제시) 논거 사용 비교

			입장			Total
			찬성	반대	중립	
대안제시	무	Count	10	21	17	48
		% within 입장	50.0%	77.8%	85.0%	71.6%
	유	Count	10	6	3	19
		% within 입장	50.0%	22.2%	15.0%	28.4%
Total		Count	20	27	20	67
		% within 입장	100%	100%	100%	100%

3) 논쟁 공동체(argument fields)의 발견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를 살펴보기 위해 각 사설 혹은 칼럼에 개진된 증거를 경제적 근거, 문화적 근거, 정치적 근거, 기타 등으로 나누어 중복 체크했다. 그 결과 찬성 측에서는 경제적 근거가 우세하게 사용되었고, 반대 측에서는 문화적 근거가 우세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축소 찬성 측에서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주장의 논거로 주로 경제 발전의 중요성, 개방의 경제적 효과, 세계시장 개방 추세 참여의 당위성

<표 8> 찬반중립 의견 간 새 제안의 합리성(대안제시) 논거 사용 비교

			입장			Total
			찬성	반대	중립	
대안합리	무	Count	16	27	19	62
		% within 입장	80.0%	100.0%	95.0%	92.5%
	유	Count	4	0	1	5
		% within 입장	20.0%	0.0%	5.0%	7.5%
Total		Count	20	27	20	67
		% within 입장	100%	100%	100%	100%

등을 들은 반면,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측에서는 문화다양성 확보, 문화제국주의에의 경계심, 할리우드의 국내영화 침투 등 문화적 논거를 들고 있었다. 찬성 측의 문화 쪽 논거 사용은 20%, 반대 측의 경제 쪽 논거 사용은 22.2% <표 9>로, 상대방 논거의 활용이 2할 정도에 불과했다. 서로 다른 논거에 대부분 의거한다는 것은 상호 논박이 어려운 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뚜렷한 논거가 발견되지 않는 글도 찬성 측에서 25%, 반대 측에서 11.1%나 차지, 설득적인 주장글로서의 함량미달을 드러냈다. 논증과 설득이라는 것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자체적 논거의 확대 재생산은 의견의 양극화를 부추겨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즉 찬성과 반대 측은 상호 대화가 불가능한, 각기 다른 논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논쟁 공동체(argument fields)란 “의사소통의 전제가 되는 이유의 합리성에 대해 공감하는 공동체(Whedbee, 1998)”로 정의된다. 여기서 공동체란 논쟁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 그 대상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일, 논쟁 대상의 우선순위를 논하거나, 논쟁 여부없이 받아들이는 일 등이 이루어지는 관념적인 마당(fields)을 뜻한다. 즉 비슷한 문제의식과 전제를 공유하는 공동체 내부에서는 논쟁을 통한 합리적인 갈등해결과 설득이 가능하나, 상이한 전제를 내세우는 공동체와는 동일한 논리로 의사소통이나 설득이 불가능하다. 논쟁 공동체에

맞는 새로운 설득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두 개의 논쟁 공동체 중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찬성하는 논쟁 공동체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영화계, 혹은 문화 쪽 논리를 중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에서 역시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논리의 토대에서 출발하기보다 문화계의 당면한 이슈로 논점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토론과 논쟁의 기본은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양측 사이의 인식의 거리는 상호 의사소통과 설득의 개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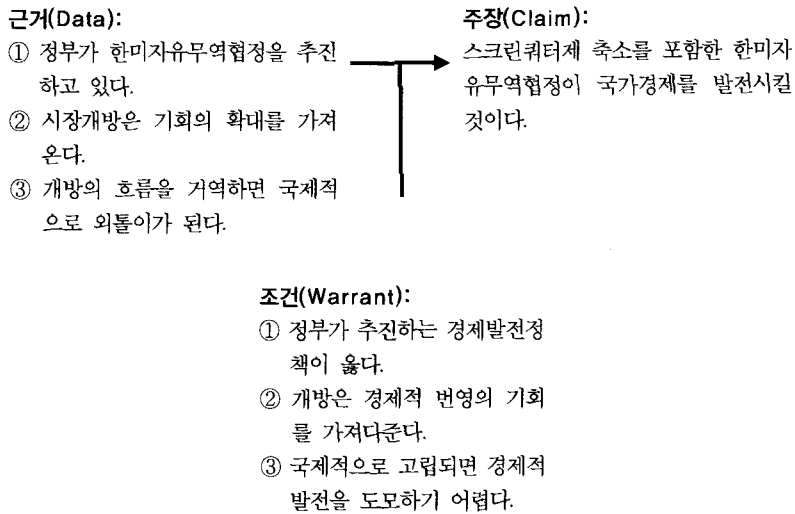
<표 9> 찬반 의견 간 논거 유형별 사용비교

		입장			Total	
		찬성	반대	중립		
근거유형	없음	Count	5	3	15	23
		% within 입장	25.0%	11.1%	75.0%	34.3%
	경제	Count	7	6	2	15
		% within 입장	35.0%	22.2%	10.0%	22.4%
	문화	Count	4	12	1	17
		% within 입장	20.0%	44.4%	5.0%	25.4%
	정치	Count	1	1	0	2
		% within 입장	5.0%	3.7%	0.0%	3.0%
	경제문화	Count	2	3	1	6
		% within 입장	10.0%	11.1%	5.0%	9.0%
	경제정치	Count	1	2	1	4
		% within 입장	5.0%	7.4%	5.0%	6.0%
Total	Count	20	27	20	67	
	% within 입장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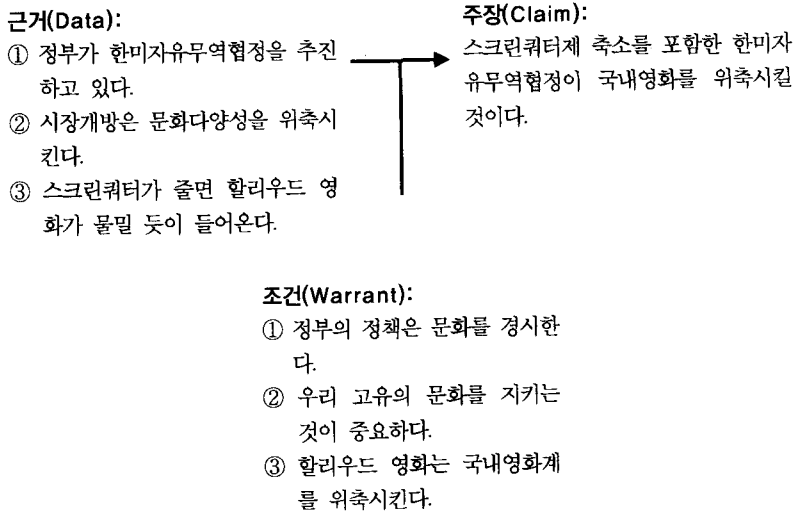
틀민은 증거, 즉 전제(data)와 주장(claim)을 연결시키는 조건(warrant)을 중심으로 논증의 구조를 설명하며 최종 주장의 설득력은 전제가 아니라 조건에 달려있다고 했다. 독자나 청중이 논증의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조건을 강화하는 증거가 덧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Toulmin, 1958). 상호 설득과 토론의 요건은, 따라서 증거에 따른 설득이 아니라, 전제를 공유하는 증거 찾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측과 찬성 측은 각기 나름대로의 증거를 들어 권위적인 논증① 실질적인 논증② 동기적인 논증③ 등으로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논증에서 조건(warrant)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사용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나 상대방 논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방 논리의 부재는 논박의 가능성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상호 설득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 톨민의 논증모델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측 논증모델



<표 11>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측 논증모델



6. 논의

언론의 의견보도가 우리 사회의 주의 주장을 증폭시키는가, 아니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개방담론이 언론의 의견보도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스크린쿼터제 관련 사실 및 칼럼을 대상으로 수사 분석을 시도했다. 방법론적 틀로는 논증학자 툴민(Toulmin)의 논증모델(Argumentation Model)과, 정책 논쟁 이슈모델(stock issues model)을 적용했다. 논증의 수사적 분석은 주장과 근거와 조건을 분리해 내서 어떤 종류의 조건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어떤 조건이 숨어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으로, 툴민의 논증모델은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 즉 근거(data)와 주장(claim)과 조건(warrant)의 구성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논증에서 강조되거나 누락된 부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정책논쟁 이슈 모델은 현대적 정책 논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세기 들어 체계화되고 활용되어 온 모델로, 현상유지(status quo), 현재의 문제점(problem), 제안된 해결책(proposed solution)등 세 가지 변수의 조합을 이용해 정책의 제안자들은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이해 시키고 반대 의견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이슈 발굴 및 제안 방법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국내 언론 의견보도의 찬성, 반대, 중립의 입장 분포와 언론사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문제 1과 관련, 연구 결과 국내 9개 일간지의 의견보도에 나타난 스크린쿼터제 축소 관련 태도는 반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찬성과 중립 의견이 균형을 이루었으나, 언론사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 즉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중에 정부를 비판한 내용은 절반(51.9%)에 불과, 반대론자 중에서 스크린쿼터 관련 정책과 정부 방침을 분리해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찬성과 반대 각각의 의견의 논리 구성과 밀도의 양상(연구문제 2)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 논쟁 이슈 개발모델 중에서 현상유지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기적 접근, 새로이 제안된 정책의 해결적 능력에 초점을 둔 치유적 접근, 새 정책의 합리성과 적절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용적 접근이 개별 의견기사에 얼마나 고르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스크린쿼터 축소가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유무로 동기적인 접근을 측정했다. 그 결과 현상 진단 쪽 논리는 찬성과 반대 양 측에서 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이 찬성에 비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 측의 대안제시가 찬성 측에 비해 적었고, 새로운 대안의 합리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논변에서도 찬성측이 반대 측을 앞서고 있었다. 반대 측에서는 현행 스크린쿼터제의 적합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적합성 논변을 펴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 스크린쿼터제를 고수하는 것 이외의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논쟁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 변화를 시도하려는 세력 사이의 공방이며, 변화를 가져오려는 측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한

논리로 현상유지를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 언론의 의견보도는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측이 반대 측에 비해 현 상태의 문제구성에 서 대안의 합리성 지적에 이르는 다양한 논리를 구비하고 있었다. 정부 방침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유지(스크린쿼터 축소)하려는 논리가 현상을 되돌리려는(현행 스크린쿼터제 유지) 논리보다 더 밀도 있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에 각기 우세하게 적용된 근거(data)와 주장(claim), 그리고 근거와 주장 사이의 조건(warrant)에 주목한 연구문제 3과 관련, 톨민의 논증 모델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논증과 찬성 논증 사이에는 전제의 공유나 조건의 공유가 발견되지 않아 각기 다른 논쟁공동체(argument fields)를 구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로 다른 논리와 전제를 가진 논쟁공동체는 이슈의 선택과 증거의 사용에서 상호 반박이나 설득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양 측의 논쟁모델에서 드러난 조건(warrant)이 반대편에게, 혹은 우리 사회 전체에 설득력을 지닌 논변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톨민의 지적처럼 그 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backing)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국내 의견보도는 증거의 사용에서 미흡함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논점을 이슈화하고 상호 토론을 유도하는 기제로서의 언론이 보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을 시사한다. 언론이 ‘시민’을 ‘공중’으로 길러내고, ‘대화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내재해 있는 이슈를 보도할 때 상호 반대되는 입장 측과 공유하는 논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하는 논리는 양측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제공하며, 그 접점에서 증거 수집과 제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상호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호 설득의 과정은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그 결과물로서 건전한 공론 형성이라는 과실(果實)을 얻게 된다.

언론이 각기 속한 ‘논쟁공동체’의 자체 논리에 함몰될 때, 사회는 도그마에 빠지고 갈등의 타협점을 찾기 힘들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말의 본래적 기능인 설득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은, 말을 근간으로 하는 언론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건전한 중재자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의견 보도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과 기술적인 정교함이 보완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본 논문의 결과는 응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강현두·오택섭·최정호 (편). (2003). 『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나남출판.
- 김옥동 (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 현 (편). (2002). 『수사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ates, B. (2005). *Inherency, Strategy, and Academic Debate*. Rostrum.
- Borchers, T. (2006). *Rhetorical Theory: An Introduction*.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Burgchardt, C. (1995). *Readings in Rhetorical Criticism*. Pennsylvania: Strata Publishing Company.
- Crowley, S. & Hawhee, D. (2004). *Ancient Rhetorics for Contemporary Students*.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 Ehninger, D. & Brockriede W. (1963). *Decision by Debate*. New York: Dodd, Mead.
- Freeley, A. & Steinberg, D. (2005). *Argumentation and Debate: Critical Thinking for Reasoned Decision Making*.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Gerrero, J. & Tejera, M. (2001). *Historia Breve de la Retorica*. 강필운 역. 『수사학의 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 Hart, R. (1997). *Modern Rhetorical Criticism*. Boston: Allyn and Bacon.
- LaRose, R. & Straubhaar, J. (2000). *Media Now: Communication Media in the Information Age*. Belmont, CA: Thomson Wadsworth.
- Lasch, C. (1990, December). *Stop Making Sense*. NewsInc, 23~25.
- McBurney, J. H., O'Neill, J. M. & Mills, G. E. (1951). *Argumentation and debate: Techniques of a free society*. New York: Macmillan.
- McCombs M. & Merritt, D. (2004). *The Two W's of Journalism*. New York: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Inc.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Newspapers*. New York: Basic Books.
- Toulmin, S. (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ulmin, S., Rieke, R. & Janik, A. (1979). *An Introduction to Reasoning*. New York: Macmillan.
- Vancil, D. (1986). *Rhetoric and Argument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Whedbee, K. (1998). "Authority, Freedom and Liberal Judgment: The Presumptions and Presumptuousness of Whately, Mill and Tocqueville." *Quarterly Journal of Speech*, 171~189.
- Whately, R. (1963). *Elements of Rhetoric*.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Willard, C. (1977). "Argument Fields" in *Advanced in Argumentation Theory and Research*.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 2006.9.1, 최종 원고 제출 2006.10.23)

Rhetorical Analysis of News Editorials on ‘Screen Quota’ Arguments: An Application of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Sung-Hee Park

Department of 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Whether to reduce the current ‘screen quota’ for domestic film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discussion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Korea. Using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the use of data and warrants for each pro and con claims as portrayed in newspaper editorial columns and to find its rhetorical significance. A total of 67 editorial columns were collected from 9 nationwide news dailies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rhetorical analysis of those articles showed that the major warrants used in each pro and con opinion were absent of the potential issues of the opponents, which inherently fails to invite rebuttals from the opposite sides. This conceptual wall in each argumentation models implies an inactive conversation and subsequent absence of clash between the pro and con argumentation fields. It is thus suggested for opinion writers to find more adequate evidences to support the data and warrants to hold persuasive power of their respective claims, ultimately to enhance the public discourse among citizens.

Key words: rhetorical analysis, Toulmin, argumentation, FTA, editorial